

한반도 평화통일 프로세스와 중국*

김경일 (베이징대학)

국문요약

냉전이 종식된 후 동북아는 다시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는 시기로 접어들었는데,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는 여전히 한반도를 구심점으로 하여 전개되고 있다. 북핵 문제는 한반도에 잔존한 냉전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고, 한반도에 잔존한 냉전구조는 한반도의 분열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반도의 통일은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냉전 구조를 해체할 것이다. 그리하여 한반도의 “지정적(地政的) 의미”가 약화되고, “지경적(地經的) 의미”가 부각되면서, “소극적 평화”를 “적극적 평화”로, “불확실한 요소”를 “확실한 요소”로 전환시킬 것이다.

중국에게 있어 한반도의 통일은 근대 이후 줄곧 중국에 영향을 미쳤던 한반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또한 한반도가 명실상부하게 해양경제권과 대륙경제권의 연결점이 되어 동북아 경제의 일체화와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 구축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통일된 한반도가 중국에 대해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분열된 한반도야말로 중국의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 중국의 굴기와 한반도의 통일 간의 관계는 동북아 지역에서 가장 안정적인 관계라 할 것이며, 양국 관계의 정확한 정립은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 구축에 큰 긍정적 힘으로 작용할 것이다.

주제어: 평화통일 프로세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북핵, 한중관계, 지정학, 지경학

* 중국어 원제는 “對於韓半島統一的中國的認識和對應”이고, 안소현(연세대학교 강사)이 번역함.

I. 들어가며

근대사 이후, 동북아 국제질서의 몇 차례 변화는 모두 전쟁을 통한 것이었다. 1894년 청일전쟁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질서의 붕괴를 가져왔고, 1905년 러일전쟁은 일본이 구축한 이른바 “대동아 공영권” 질서의 발단이 되었고, 1950년 “한국전쟁”은 동북아 냉전 질서 체제를 고착화하였다. 이들 전쟁은 모두 한반도에서 시작되었거나 한반도에서 일어났고, 중국의 정세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다.

냉전이 종식된 후 동북아는 다시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는 시기로 접어들었는데,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는 여전히 한반도를 구심점으로 하여 전개되고 있다. “북핵” 문제가 가져온 동북아 지역의 안전에 대한 고민은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 구축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중국의 주변 환경의 안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쳐, 그 위협이 중국의 영토·주권·생존보장 문제까지 파급되기에 이르렀다. “북핵” 문제는 한반도에 잔존한 냉전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고, 한반도에 잔존한 냉전구조는 한반도의 분열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반도의 통일은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냉전 구조를 해체할 것이다. 그리하여 한반도의 “지정적(地政的) 의미”가 약화되고, “지경적(地經的) 의미”가 부각되면서, “소극적 평화”를 “적극적 평화”로, “불확실한 요소”를 “확실한 요소”로 전환시킬 것이다. 한반도의 통일은 근대 이후 줄곧 중국에 영향을 미쳤던 한반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또한 한반도가 명실상부하게 해양경제권과 대륙경제권의 연결점이 되어 동북아 경제의 일체화와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 구축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II. 한반도와 중국 관계의 역사적 정립

많은 학자들은 한반도가 일찍부터 외적의 중국 침입을 제어해주는 일종의 “완충국” 역할을 하였다고 여긴다.¹⁾ 그러나 해양 세력이 한반도를 통과하여 중국대륙을 정복하려는 시도가 있기 전까지 한반도의 중요성은 결코 지리적 완충 역할 측면에 있지 않았다. 고대 중원(中原)의 정권을 위협했던 것은 주로 북방의 소수민족이었다. 중원 정권이 경계하였던 것은 한반도와 이들 소수민족이 연합하여 중원 정권을 공략하는 것이었다. 중원 정권의 입장에서 보면 “한반도와의 평화로운 관계 유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실로 적지 않았다.”²⁾

고대 중국과 한반도와의 관계의 역사적 궤적을 살펴보면, 고대 중국의 정세가 한반도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대체로 중국이 통일되고 번영하였던 시기에는 한반도 또한 상대적으로 안정을 유지하였고, 양국의 관계도 밀접하였다. 성당(盛唐) 시기의 당과 통일신라의 관계가 바로 그러하다. 중국의 정세가 혼란스럽거나 왕조 교체 시기일 경우에는 한반도 또한 혼란에 빠지거나 정권이 교체되거나 하였고, 양국의 관계에도 파란이 일어났다. 중국의 원명(元明) 교체시기나 명청(明清) 교체시기가 그러하다.

중국과 한반도 사이에 안정된 발전적인 관계가 성립한 것은 중국의 성당(盛唐)과 한반도의 통일신라 시기로부터이다. 중국을 중심으로 한 “천조 예치 체계(天朝禮治體系)”의 형성 또한 이 시기 양국 간의 밀접한 관

1) Robert R. Simmons 著, 林建彦, 小林敬爾 翻譯 『朝鮮戰爭と中ノ關係』(東京: コリテ 評論社, 1976). p.6.

2) 黃枝連, 『東亞의 禮儀世界—中國封建王朝與韓半島關係形態論』(北京: 中國人民大學出版社, 1994). p.27.

계에 힘입은 것이다. 그 후 중국과 한반도의 상보적 관계는 바로 이 체계에서 전개되어 나왔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지극히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는데, 그 자체가 바로 중국 봉건왕조 질서 유지와 직결되었기 때문이다. 이 체계는 사실상 당시의 국제질서라 할 수 있다. 한반도의 입장에서는 “중국 대륙에 강대한 정부가 있어서 그것을 둘러싼 지역에 국제질서를 제공하고, 한반도와 중국 간의 평화 및 전체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유지”³⁾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그러나 이 체계는 결코 순조롭게 발전해나가지 못하였다. 중국의 정국에 변화가 발생하여 왕조가 바뀌거나 신규 세력이 교체되면 기존의 체계는 크게 동요될 수밖에 없었고, 양국 간의 관계 변화에 따른 충돌이 야기되었다. 예를 들어 당조(唐朝)가 멸망한 후의 오대십국(五代十國) 시기에 고려와 송조(宋朝)는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며 이를 통해 거란과 여진을 견제하였는데, 그 결과 고려와 거란 사이에 충돌이 있게 되었다. 더욱이 원조(元朝)가 중국을 통일한 후에 원은 무력으로 고려를 정복하고자 하였고, 고려는 원에 대항하였으나 결국은 정복당하였다. 양자의 관계는 정복자와 피정복자의 관계가 되었으니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체계 내의 관계가 아니었다. 게다가 “몽고인은 유학과 예치주의를 숭상하거나 지지하는 자들이 아니었으므로” 문화적으로도 소통하기 어려웠다. 양자의 관계는 “많은 부분이 ‘천조 예치 질서’라는 큰 틀 안에서 전개될 수 없었다.”⁴⁾

원명(元明) 교체시기에 이르러 고려의 공민왕은 반원친명정책(反元親明政策)을 실시하였으나 친원파(親元派)의 반대로 고려 조정은 친원(親元)과 친명(親明) 두 파로 양분되었다. 이에 명조(明朝)는 고려에 압력을 가하였고 양국은 다시 긴장 관계에 놓였다. 고려 왕조는 요동정벌(遼東

3) 위의 책, p.109.

4) 위의 책, p.183.

征伐)을 단행하였으나 반대파 이성계(李成桂)가 철병(撤兵)하여 정변(政變)을 일으켰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여파로 멸망하였다.

명청(明清) 교체시기에 조선은 처음에는 명과 후금(後金) 사이에서 중립적인 외교정책을 취하였으나, 인조반정(仁祖反正) 후에는 친명배금 정책(親明排金政策)을 시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후금으로부터 청조(淸朝) 초기에 이르기까지 조선에 대한 두 차례 정벌 전쟁이 발생하였다.

이상으로부터 한반도와 중국은 비록 당(唐) 중엽 이후 함께 하였으나, 한반도는 늘 중국 정세의 영향을 받아 왕조가 바뀔 때마다 거의 매번 진통을 겪어야 했고, 그런 다음에는 새로운 질서 체계로 재편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어쨌든 그러한 진통은 모두 구 체계를 유지하거나 신 체계를 건립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이다. 그리고 구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든 신 체계를 건립하기 위한 노력이든 결과적으로는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었다. 설사 왕조가 달라진다 하여도 예치 체계의 본질적인 성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일단 체계가 확립되면 쌍방은 그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더욱이 체계의 중심 국가인 중국은 체계 유지를 왕조 이익의 일부분으로 간주하였다.⁵⁾

그러나 근대에 이르러 중국이 반식민지 봉건사회(半植民地 封建社會)로 전락하여 국제적 지위가 급격히 하락하게 되면서 “천조 예치 체계”는 유명무실해졌고, 게다가 열강들이 한반도에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중국과 한반도의 관계에도 큰 변화가 있게 되었다. 1880년대 초, 청의 주일공사관 참찬(駐日公使館參贊)이었던 황준헌(黃尊獻)은 『조선책략(朝鮮策略)』에서 조선에게 러시아에 대한 대비에 주의해야 하는데,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가까이 하고, 일본과 손을 잡고, 미국과 연대해야

⁵⁾ 김경일·홍면기,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 기원: 한중관계의 역사적·지정학적 배경을 중심으로』 (서울: 논형, 2005).

한다”고 권고하였다. 1881년 만인의 조선 유생이 상소를 올려 외쳤던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은 이미 “천하를 호령할 수 없었다.” 당시 중국에게 조선의 문제는 중국 한 나라가 좌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중국은 복잡한 국제 관계 속에서 조선과의 관계를 고려해야만 했다.

그 후 근대사로 접어들면서 전개된 역사는 중국의 주변국 가운데 중국의 정세에 가장 깊은 영향을 미친 것이 한반도임을 보여준다. 1894년 한반도에서 시작된 “청일전쟁”은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붕괴를 가져왔고, 중국은 한반도의 무대에서 퇴출되어 중국과 한반도는 “순망치한(唇亡齒寒)”의 관계가 되었다. 1905년 역시 한반도에서 시작된 러일전쟁은 일본의 조선 병탄을 가속화하였고, 동시에 조선은 중국 대륙 침략의 발판이 되었다. 1950년 한국전쟁의 결과 중국은 막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는데, 타이완(臺灣) 해방의 기회를 놓쳤을 뿐 아니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세계와 수십 년 동안 단절을 겪어야 했다.

역사적 경험으로 보건대, 한반도의 안정 여부와 한반도의 자주 독립 국가 성립 여부는 직접적으로 중국의 안전에 관계될 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관계된다. 이는 역사가 내린 결론이자 미래에 대한 전망이다.

Ⅲ. 전후 한반도 문제의 여정과 중국

전후(戰後) 미국과 소련의 세력 쟁탈로 인하여 한반도는 인위적으로 분할되고 한반도의 남북 정치세력은 결국 분열되었다. 전후 한반도 상황에 대하여 가장 관심을 기울인 나라는 당연히 중국이다. 중국은 청일전쟁을 비롯하여 러일전쟁, 중일전쟁을 겪으며 한반도의 지정적 중요성을

절감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시기, 중국의 국민당과 공산당은 각각 자신들이 지지하는 한반도의 독립운동 세력을 지원하며 전후의 한반도와 중국 관계를 구상·기획하였다. 그런데 전후 미국과 소련은 각각 한반도를 자신들의 전략 범위 안에 귀속시켜 한반도의 지정적 중요성을 다시금 상승시켰다. 이는 본래 중국이 원치 않았던 상황일 뿐 아니라 가장 우려하였던 상황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지정적 환경은 결국 중국이 한국전쟁에 개입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중국은 서방진영과 장장 몇 십 년 동안의 냉전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1948년 남북한이 각각의 정부를 건립하였을 때, 쌍방의 목적은 결코 세력 균형을 유지하거나 현 상황을 유지하는 데 있지 않았다. 남북한은 모두 몇 천 년의 역사를 지닌 통일국가가 분열되는 것을 용인할 수 없었고, 통일은 당연 남북한이 추구하는 지고무상(至高無上)의 목표였다. 남북한 공히 지니고 있었던 강렬한 통일 염원은 남북한 관계를 제로섬 관계가 되도록 하였다. 남북한 모두 상대방을 “위법집단” 내지는 “괴뢰집단”으로 간주하고, 북한은 “국토완정론(國土完整論)”을 제기하며 통일을 실현하고자 하였고, 남한은 “북진 통일론(北進統一論)”을 제기하며 잃은 영토를 회복하고자 하였다.⁶⁾ 심지어 북한은 헌법에 서울을 수도로 명시하였는데, 이는 1970년 헌법을 수정하기 전까지 바뀌지 않았다. 한국전쟁은 바로 남북한의 제로섬 관계가 가져온 전쟁이었다. 냉전 시기, 남북한 양측은 또 다른 제로섬 게임을 전개하였는데, 그것이 이른바 “체제 경쟁”이다. 어떤 의미에서 말하자면, 냉전 시기 남북한 양측의 역량 비교에서 생겨난 변화 또한 이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남북한이 “제로섬 관계”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양측은 통일 문제로 길

⁶⁾ 김경일·홍면기,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 기원: 한중관계의 역사적·지정학적 배경을 중심으로』.

고 긴 줄다리기를 전개해야 했다. 한국전쟁이 끝난 다음 해, 제네바회의에서는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사안으로 토론을 진행하였다. 미국과 소련 두 진영에 나누어 속한 남한과 북한 또한 각각의 통일정부 건립 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남북한 양측의 평화 공세는 사실상 한국전쟁 이전 견지하였던 각각의 입장을 반복한 것일 뿐, 남북한은 여전히 각각의 방식으로 상대방을 통일하고자 하였다. 표면적으로 보면 1950년대 한반도 평화통일 논쟁은 어떻게 통일정부를 건립하는가의 문제를 둘러싸고 전개되는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는 제로섬 게임으로, 양측은 사실 무력통일 방침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1960-1970년대에 이르러 남북 양측은 위에서 말한 체제 경쟁에 돌입하여 다른 방식의 제로섬 게임을 전개하였다. 남북한은 경제 건설, 국방 건설 등에서 격렬하게 경쟁하였다. 남한의 박정희(朴正熙) 정부는 “선 경제, 후 통일” 방침을 내세웠고, 북한은 “경제·국방 병진” 방침을 내세웠다. 박정희 정부가 실현한 “한강의 기적”의 주요 동력은 남북한의 “제로섬 게임”으로부터 나왔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 양측은 한편으로는 경제 건설을 강화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다른 성격의 “통일”을 모색하였다. 남북한은 1972년 “7·4공동성명”에 합의하고 처음으로 평화통일 3대 원칙을 제시하였다. 이는 시대의 한 획을 긋는 의미를 지닌 선언으로 남북한 쌍방이 무력 통일 방침을 포기하고 평화 공존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표명한다.⁷⁾ 같은 해 북한은 북한과 미국이 한국전쟁의 실제 당사자임을 제기하고 처음으로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의하였다.⁸⁾ 그러나, 미·소 냉전 체제 하에서 남북한의 진정한 화해와 북한·미국 간의 관계 정상화, 그리고 이를 통한 남북한 평화통일

7) 김경일,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의 필요조건과 충분조건(특집: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과 전망),” 『북한학연구』 제1호(2005), p.9.

8) 『人民日報』, 1974년 3월 26일.

의 실현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비현실적인 것으로, 단지 또 다른 형식의 대결을 의미할 뿐이었다.

냉전 종식 이후, 한반도 평화의 진행에 영향을 미쳐왔던 미국과 소련의 대항 형세가 사라지자 러시아와 한국, 중국과 한국은 국교를 수립하였고, 냉전 시기의 이른바 “북방 삼각 관계”는 해체되었다. 그러나 미국·일본·한국의 “남방 삼각”은 북한과 계속 대치하는 상태로 있어 냉전 체제는 여전히 잔존하였다. 남북 대결에서 열세에 놓여 있던 북한은 “냉전 체제”를 조속히 벗어나고자 미국·일본·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화해의 발걸음을 가속화하였다. 구체적으로 미국과 고위 회담을 진행하고, 일본과 8차에 걸쳐 관계 정상화 회담을 진행하였으며, “남북 기본 합의서”의 체결, “한반도 비핵화 선언”,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등, 이로써 한반도 냉전 체제의 종식이 목전에 있는 듯하였다. 그러나 1차 북핵 위기의 발발로 평화의 분위기는 일소되었고 한반도에는 다시 암운이 드리워져 전쟁 국면으로 한 발짝 다가섰다.

1차 북핵 위기는 북한이 냉전의 그늘에서 벗어나 한국과 평화 공존하는 것이 결코 한반도의 남북 간의 문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준다. 이 문제는 한반도 주변 강대국 간의 이해관계와 관련이 있는데 특히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전략적 이익과 관련이 있다. 냉전 종식 후에도 미국은 냉전 시기의 “남방 삼각” 관계, 즉 미·일 및 한·미의 동맹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계속 북한 문제에 개입하였는데, 이는 자국의 전략적 이익에 입각한 것으로 단지 북한에 대한 것만은 아니었다. 미국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이 지역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거점을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하고, 어쩌면 미국이 이 지역 업무에서 물러나야 하는 전주가 될 수도 있다. 1994년 북·미 간 체결한 제네바 합의의 경우, 미국은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였다. 하나는 미국이 북한에 “연착륙”하기를 희망한다는 점이었고,

또 하나는 북한이 곧 붕괴되리라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북한의 입장에서 제네바 합의는 사기를 진작시키는 획기적 의미를 지닌 성과였다. 북한은 핵 협의를 이행하기 위해 북·미 간 “임시협정”을 체결하여 이로써 휴전협정을 대신하자는 뜻을 제의하였다. 북한에게 1953년 체결한 휴전협정은 단지 북·미 간 체결한 협정일 뿐이었다. 북한은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고, 또한 오로지 미국과 담판하고자 하였는데, 그 의도는 역시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있었다.

당시 한국·미국은 4차 회담을 열어 평화 시스템 구축 문제를 토론할 것을 제의하였는데, 이에 중국은 다시 한반도와 관계한 국제 협상에 참가하게 되었다. 당시 중국은 비록 이미 한국과 수교를 맺었고, 한국과 우호적인 정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북한에 기울어져 있었다. 4차 회담에서 중국은 대립 종식과 관계 개선, 평화적 공존, 한반도의 자주·평화 통일 실현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각국에게 평화적 수단으로 모든 분쟁을 해결하고 평등·호혜 원칙의 기초에서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키며 군사적 신임 조치를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군비를 감축할 것을 촉구하였다.⁹⁾ 4차 회담은 6차례 개최되었으나 미국과 남북한 각자의 목적은 달랐다.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에 중점을 두고 이른바 “미국과 통하고 남한을 봉쇄하는” 정책을 취하였고, 남한은 4차 회담의 기회를 이용하여 북한과의 양자 대화를 시도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미국은 4차 회담을 통해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장악하고자 하였으므로 남북한 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그다지 서두르지 않았다. 4차 회담은 결국 흐지부지 끝나게 되었는데 이는 각국이 추구하였던 목표가 달랐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

1차 북핵 위기가 한반도의 남북관계가 완화되고 북한·일본 관계에 해

9) 『光明日報』, 1999년 1월 24일.

동의 기미가 보일 때 일어났던 것과 마찬가지로, 2차 핵 위기 또한 남북한 고위 당국자 회담과 북한·일본 고위 당국자 회담이 개최되어 북한의 외교 전략 중심이 미국을 벗어나 더욱 적극적인 전 방위 외교로 전향되는 시점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미국은 남북한 및 북한·일본 관계가 미국이 설정한 구조 밖에서 개선되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았다.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통로를 봉쇄하여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9.11사건이 발생한 후 미국은 북핵 문제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모색하기 시작했고 중국 또한 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였다. 즉 중국과 미국의 협력이 6자 회담을 이끌어냈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중국·미국·러시아·일본 및 남북한이 한 자리에 앉아 논의하는 6자 회담이 역사상 최초로 열리게 되었다. 이 회담의 매개가 된 것은 북핵 문제이고, 근본적인 동기는 각국의 이해관계에 의한 것이었다.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 구축이라는 각도에서 보자면, 6자 회담은 사실상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각국이 힘을 겨룬 무대라고 할 수 있다. 냉전 종식 후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 건립은 북핵문제 해결을 계기로 그 서막을 열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6자 회담의 가장 빛나는 성과를 나타내는 “9.19 공동선언”은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의 윤곽을 그려내었는데, 평화적 방법으로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북·미 및 북·일은 관계 정상화 실현을 위한 실제적 조치를 취하며, 쌍방 혹은 다자의 방식을 통하여 에너지·무역 및 투자 영역의 경제적 협력을 촉진하고, 공동으로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하며, 한반도의 영구한 평화 시스템 건립과 동북아 안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을 논하였다.

근대사 이후 한반도가 줄곧 동북아 질서 변화의 진원이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 건립도 한반도를 핵심 지역으로 하여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과거의 전쟁 방식과 달리 동북아는 평화적 방식으로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고자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길고

긴 반복과 조정의 과정이 필요하다.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는 북핵 문제를 매개로 하여 6자 회담의 형식으로 조정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북핵 문제 해결에는 여러 가지 장애 요소가 존재할 것이며, 이는 한반도 통일 진행 및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에도 적지 않은 위해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북핵 문제의 근원 가운데 하나는 바로 미국이 한반도를 줄곧 자신의 전략 범위에 포함시켜 한반도를 동북아 전략의 거점으로 삼아 냉전 체제 속에 묶어 놓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북핵 문제는 동북아의 강대국 관계를 굴절하여 반영하는 동북아 국제 정치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북핵 문제는 이미 “북핵”이라는 그 자체를 벗어났을 뿐 아니라 “북·미 관계”의 범주 또한 벗어나서, “강대국 관계” 차원의 움직임이 이끌어냈는데, 6자 회담이 바로 그 결과이다. 그러므로 북핵 문제가 있게 된 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대국 간 “조정”의 과정을 통하여 점차적으로 한반도에서 그들의 전략적 역할을 없애고, 한반도의 지정적 의미를 약화시켜야만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각 측의 힘겨루기 중 전개될 것인데, 때로는 상당히 격렬한 대결을 겪어야 할 것이고 때로는 힘든 교섭·조정 과정을 겪어야 할 것이다. 지금과 같이 6자 회담이 여러 해 동안 불발된 상황은 상호 교섭과 조정이 결코 쉽지 않음을 나타낸다.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북핵 문제는 더욱 곤경에 빠져들었다. 3차 핵실험은 동북아 지역을 다시 금 흔들어 놓았고 한반도는 한국전쟁 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중·일 관계, 한·일 관계, 남북한 관계, 북·미 관계, 북·일 관계가 날로 긴장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는데, 이는 북핵 문제의 해결과 동북아 국제 정치의 운행이 연동함을 나타낸다. 북핵 문제로 인한 위기는 동북아 국제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동북아 국제 관계는 다시 북핵 문제의 해결에 영향을 미친다. 이제 동북아는 새로운 차원의 교섭과 조정에 접어들게 되었다.

IV. 한반도 통일 진행의 향방과 중국

한반도의 분열은 미국과 소련의 외적 요인과 남북한의 내적 요인이 상호 작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 문제인 동시에 국제 문제이다. 즉 남북 관계와 국제 관계가 교차하며 상호 영향을 미치고 상호 작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남북한 관계가 긴장되면 이에 상응하여 국제 관계 또한 변화가 있게 된다.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 때 한국과 중국의 관계 역시 급격히 긴장된 것이 그 한 예이다. 반대로 남북한 관계가 완화되면,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 관계에도 변화가 있게 된다. 모두 알다시피 두 차례 북핵 위기는 모두 남북 관계가 완화되는 추세에 있을 때 발생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말하자면, 한반도가 통일로 나아가는 것은 남북 간의 화해 문제이기도 한 동시에 국제 관계가 다시금 조정되고 재정립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근대사 이후 한반도의 역사를 둘러보면, 한반도 문제의 핵심은 한반도가 각 시대에 지녔던 “지정적 의미”에 있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우리가 이해하는 지정적 의미는 정태적인 것이 아니라 동태적인 것이다. 그 의미는 “어떤 지리 환경이 어떤 국가의 전략적 목적의 범위나 시야에 들어감으로써 나타나는 가치”인데, 이는 “자연적 요소와 인위적 요소의 유기적 결합”으로, 한 지역이 나타내는 지정적 의미는 인류 발전의 시대적·지역적 정치 상황이나 국가 간 전략 지향의 충돌 상태 등 요소와 관련이 있다.¹⁰⁾ 다시 말해, 근대 이후 한반도는 열강의 전략적 목적의 범위나 시야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지정적 의미가 부각되었

¹⁰⁾ 金景一·金強一, “朝鮮半島的地緣政治意義及其對我國的影響研究”, 『延邊大學學報: 社會科學版』 第41卷 第4期(2008), p.38.

고, 또 이로 인해 연이은 강대국 간의 충돌과 전쟁이 있게 되었다. 19세기 말, 러시아는 극동으로부터 태평양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남하 전략을 세웠고, 한반도는 이에 러시아의 전략적 판도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 일본은 중국 침략을 위해 “북진 전략”을 세웠고, 한반도는 이에 다시 일본의 전략적 판도 안에 들어가서 일본의 중국 대륙 침략의 발판이 되었다. 중국은 한반도에서의 전통적 지위를 보존하기 위해 한반도를 자신의 전략 안에 포함시켰다. 또 멀리 유럽의 영국 또한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군대를 파견하여 한반도의 거문도를 점령하였다. 최소한 러시아·일본·중국 삼국의 전략적 판도가 교차하였던 한반도에는 “청일전쟁”, “러일전쟁”이 발발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두 전쟁이 끝난 다음 한반도의 비극은 다시 미국과 소련의 전략적 이해관계의 판도 속으로 들어간 것에서 시작되었다. 미국과 소련은 각자의 전략에 따라 한반도를 인위적으로 분할·점령하였고, 결국에는 한국전쟁과 60여 년의 분단이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냉전 종식 후, 한반도는 다시 동북아 국제 정치의 초점이 되었는데, 이는 강대국의 전략이 여전히 한반도에 머물러 있다는 데에 그 근본 원인이 있다. 적어도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반도는 동아시아 전략을 추진하는 거점이다. 미국이 이 거점을 이용하여 미일·한미 간 동맹을 강화하여 막 굴기하는 중국을 견제하고자 한다면, 한반도의 지정적 의미는 여전히 부각될 수 있다. 실제로 지금의 동북아 국제 정치는 바로 이와 같이 전개되고 있다. 강대국 전략이 한반도에서 펼쳐질 수 있는 관건은 한반도가 여전히 분열 상태에 놓여 강대국이 개입할 여지를 제공한다는 점에 있다. 만약 한반도의 통일이 실현된다면 강대국의 전략은 한반도에 발을 붙이기 힘들 것이고, 한반도의 지정적 의미는 분명 약화되거나 소멸될 것이다.¹¹⁾ 이러한 의미에서 말하자면, 한반도의 평화 통일 진행은 중국에게 매우 유리하게 작용한다. 한반도의 지정적 의미가 부각될수록 동북

아에서 중국이 발전할 수 있는 공간이 제한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냉전 시기에든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은 한반도라는 거점에 의탁하여 미일 동맹 및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한일 군사협정”을 촉구하여 중국에 막대한 압력을 가하고자 한다.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 후 미국은 북한을 위협할 목적으로 제7함대를 “중국의 건드려서는 안 되는 지역”이라 일컬어지는 서해(黃海)로 진입시켰다. 미국의 함대 위협을 두고 어떤 이는 심지어 “항장(項莊)이 검무를 춘 의도는 유방(劉邦)을 죽이는 데 있었던” 것과 같이 미국에게 실제로 다른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 의심한다. 이로부터 보건대, 한반도의 지정적 의미가 부각될수록 미국이 전략을 펼치는 데에는 유리해지고, 중국에는 불리해진다. 이러한 상황은 근대사 이후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연루된 결과로 중국의 영토·주권·생존이 위협 당하였던 국면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근대 이후 한반도 문제의 핵심은 “한반도의 지정적 의미”의 강화와 부각에 있다. 한반도 문제의 핵심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지정적 의미”를 약화하여 점차 소멸시켜야만 한다. 그리고 한반도의 지정적 의미의 궁극적인 약화와 소멸은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통하여 완성해야 한다. 중국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한반도의 가장 이상적인 상태는 바로 “지정적 의미가 약화·소멸되는 상태”이다. 다시 말해서 안정적이고 평화롭고 통일된 한반도가 중국의 국가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¹²⁾

과거 우리는 한반도의 지정적 의미를 말할 때, 대부분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한반도에서 교차·충돌하고 전쟁까지 일어날 수 있다는 측면을 말하였다. 이제 우리가 한반도의 “지정적 의미”를 약화하려면, 중점적으로 말해야 할 것은 “해양 경제권”과 “대륙 경제권”이 한반도를 교량으

11) 위의 책, p.42.

12) 위의 책, p.44.

로 화합하고 융합하며 발전한다는 측면일 것이다. 다시 말해, 한반도의 “지정적 의미”를 적극 부각하여야 한다. 한반도의 “지정적 의미”를 부각한다는 것은 사실 협력과 공동 이익과 발전을 부각하는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통일 진행 과정은 바로 그 “지정적 의미”를 약화하고 “지정적 의미”를 부각시키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지정적 의미”는 “지정적 의미”와 다르다. “지정적 의미”는 전체 국력의 대항과 경쟁을 강조하지만 “지정적 의미”는 지정적 수단을 이용하여 국가 이익과 국제 관계를 모색할 것을 강조한다. 오늘날 세계적 추세는 지정적인 것으로부터 지정적인 것으로 전환되고 있다. 경제적 이익의 수요가 정치·군사 및 의식상태를 초월한다.¹³⁾ “지정적 각축” 또한 “지정적 각축”을 대체하고 있다.¹⁴⁾ 한반도의 “지정적 의미”를 부각시키는 것은 세계 발전의 추세에 부합하는 것일 뿐 아니라 남북이 “지정적 의미”를 약화시키고, 경제적 교류와 협력 가운데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는 것에도 부합한다.

한반도 평화통일 진행을 논할 때, 그 주체는 한반도의 남북한이다. 남북한은 한반도 문제의 내적 요인이다. 다른 국가는 단지 외적 요인일 뿐으로 외적 요인은 내적 요인을 통하여 작용한다. 중국은 줄곧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 당사자의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에 방문했을 때,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중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제의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구상을 환영하며 남북한 관계 개선과 남북한의 화해 협력, 그리고 자주 평화통일 실현을 지지한다”¹⁵⁾고 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기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성공 여부는 남북한의 경제 교류와 협력에서 결정되는 바가 클 것이다.

13) 韓銀安, “淺析地緣經濟學,” 『外交學院學報』 第 75期(2004), p.73.

14) 위의 책, p.70.

15) 『新華社』, 2013년 6월 28일.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남북한 관계의 본질은 “제로섬 관계”이다. 이러한 “제로섬 관계”에 의지하여 “정치적·군사적 신뢰”를 실현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게다가 남북한은 체제가 달라 더욱 어렵다. 그리고 어떠한 “신뢰 관계”를 설립하더라도 정권 교체에 따라 그 동안의 모든 노력이 허사로 돌아갈 수도 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와 북한이 세운 “신뢰 관계”가 이명박 정부에 이르러 일소된 것이 그 한 예이다. 그러나 경제적 협력은 이와 다르다. 경제는 그 자체가 신뢰를 기초로 운행되고 신뢰가 없으면 성립되지 않는다. 남북한이 함께 설립한 개성 공단을 예로 들면, 이명박 정부 시기 남북 관계가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었을 때에도 공단은 상대적으로 평온하였다. 박근혜 정부에 이르러 개성 공단이 폐쇄될 상황이었으나, 남북한은 결국 살려 내었다. 이는 정권 교체가 정치·군사 관계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경제 관계는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실현하는 가장 좋은 시작점은 바로 경제협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의 “지경적 의미”를 부각하는 것은 중국의 입장에서 보자면, 진작 일로에 있는 동북아 지역 경제가 크게 탄력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일본과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이 동북아 경제 활동에 참여하려는 욕망을 극도로 활성화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동북아 지역의 대규모 경제 협력 내지는 국제적 차원의 협력 체계 건립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을 갖게 될 것이고, 이는 중국이 설정한 전략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 통일 프로세스에서 북한의 경제를 회복·발전시키는 것은 지극히 중요한 부분이다.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북한의 경제 발전 여부는 한반도의 평화 통일 프로세스가 순조롭게 진행될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북한의 시장 경제 요소를 북돋아주기 위해서는 북한이 국제 사회에 진입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북한의 변화를 재촉하기 위해서는 마찬

가지로 북한의 지정적 요소를 약화하고 지정적 요소를 더 많이 말해야 하며, 아울러 북한의 자원에 의한 변화를 더 많이 말해야 한다. 만약 북한에 대한 정책이 지정적 요소에 치중해 있다면, 언급하는 내용은 대부분 북한에 압력이나 제재를 가하거나, 북한과 대항, 심지어 충돌하는 측면에 편중될 수밖에 없다. 만약 지정적 각도에서 북한에 접근한다면 북한과의 교류와 협력, 공동의 이익 및 발전 측면을 더 많이 말하게 될 것이다. 근래 중국은 “정부인도, 기업위주, 시장운행, 상호이익”의 원칙에 따라 무역·투자·기초설비건설·자원개발이용·농업 등 영역에서 북한과의 실무 협력을 한층 더 심화하고 있는데, 이는 곧 지정적 요소를 강화하는 것이다.

근래 북한은 3차 핵실험을 강행한 후 “핵무장과 경제건설 병진”이라는 노선을 제시하였다. 과거 일찍이 1960년대 북한은 “국방건설과 경제건설 병진” 노선을 제시한 바 있다. 말은 ‘병진’이라고 하지만 북한은 국방건설 측면에 치중하였다. 북한의 군사비용이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급격히 증가하여 1961년 2.8%에서 1967년에는 30.4%에 달하였다. 현재 북한은 다시 “핵무장과 경제 병진 노선”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둘은 서로 충돌하므로 ‘병진’하기 힘들다. 핵무기를 위해서는 서로 대항하는 긴장 국면이 필요하고, 경제건설을 위해서는 서로 협력하는 안정된 국면이 필요하다. 양자는 함께 성립될 수 없으므로 북한은 어느 한 쪽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 현재 정세로 보자면, 북한의 당면한 과제는 경제발전이다. 북한 또한 한반도의 “지정적 의미”를 부각해야 할 충분한 동기가 있다. 그리고 북한은 2000년대 이래로 국가적 전략 중심을 점차적으로 경제건설 측면으로 옮기고 있다. 김정은 시대에 이르러서는 경제건설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나 북핵 문제는 경제 발전을 막는 큰 걸림돌이다. 북한이 처한 국제적 환경은 북한으로 하여금 경제건설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을 구비하기 어렵게 하므로 경제 강국의 목표

에 이르기까지는 산재한 어려움이 너무도 많다.

북한의 3차 핵 실험 후,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에 찬성하고 성실하게 이행하였다. 외국 특히 한국의 주요 매체들은 중국의 대북 정책에 질적인 변화가 생겼다고 말한다. 일부는 이 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중국의 대북정책에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고, 지금은 변화가 생겨 비록 이전과 같은 정책이지만 효과는 다르다고 여긴다. 그들이 보기에 북한이 위기 조성 국면에서 갑자기 대화로 전향하게 된 것은 중국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어떤 전문가는 심지어 중국이 이미 한국 주도의 통일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한다. 마치 한국의 대북 정책이 중국의 대북 정책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듯하다. 중국의 대북 정책을 어떻게 정확하게 파악하고 판단 착오나 오판을 방지하는가는 현재 한중 관계에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중국의 대북 정책에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북한의 3차 핵 실험에 대한 반응에서 나온 변화이다. 그러므로 중국의 이러한 변화를 일부 한국 학자들이 말하는 것과 같이 전략상의 변화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앞으로 북한이 다시 핵 실험을 강행한다면 중국의 대북정책 또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어쩌면 이른바 질적 변화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은 미국과 달리 대화와 담판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중국은 일부 한국 학자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한국과 손을 잡고 북한에 압력을 가하여 북한을 굴복시키는 것과 같은 방식을 취하지는 않을 것이다. 한반도의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6월 시진핑 주석과 박근혜 대통령이 회담에서 말한 바대로, 중국은 예전과 변함없이 남북한의 자주 평화 통일 실현을 지지한다. 중국이 주장하는 자주 평화 통일은 두 가지 점을 강조한다. 하나는 통일의 과정은 반드시 평화적이어야 하며 무력을 반대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통일은

만드시 자주적이어야 하며 외세 주도의 통일 진행을 반대한다는 것이다.

1840년대 아편전쟁으로부터 중국은 반봉건·반식민지 상태로 전락하여 한때 “동아시아의 병자(東亞病夫)”로 불린 적이 있었다. 거의 한 세기 반에 달하는 기간 동안 동아시아 및 한반도는 번영·강성한 중국을 본 적이 없다. 한반도는 20세기 초에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고, 전쟁 후에는 다시 남북으로 갈라져 오늘에 이르기까지 통일을 이루지 못하였다. 다시 말해서, 한 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동아시아 및 중국은 자주적 내지는 통일된 한반도를 본 적이 없다. 오늘날 중국의 굴기와 함께 한반도는 통일 프로세스에 진입하였는데, 이제 양측은 근대 이후 경험해 보지 못한 경험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 과정에서 서로 간에 모종의 위협이나 우려를 느끼게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로, 양측은 쌍방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역사를 살펴보았을 때 강대했던 중국은 한반도에 위협을 조성하지 않았고, 오히려 혼란스럽고 빈약한 중국이 한반도 정국에 위협으로 작용했다. 마찬가지로 통일된 한반도가 중국에 대해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분열된 한반도야말로 중국의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 중국의 굴기와 한반도의 통일 간의 관계는 동북아 지역에서 가장 안정적인 관계라 할 것이며, 양국 관계의 정확한 정립은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 구축에 큰 긍정적 힘으로 작용할 것이다.

■ 접수: 2013년 11월 20일 / 심사 : 2013년 11월 27일 / 게재확정: 2013년 12월 16일

【참고문헌】

국문단행본, 국문논문

김경일.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의 필요조건과 충분조건(특집: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과 전망).” 『북한학연구』 제1호(2005).

김경일·홍면기.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 기원: 한중관계의 역사적·지정학적 배경을 중심으로』. 서울: 논형, 2005.

외국어단행본, 외국어논문

Simmons, R. Robert 著. 林建彦, 小林敬爾 翻譯. 『朝鮮戰爭と中ソ關係』. 東京: コリア 評論社, 1976.

金景一·金强一. “朝鮮半島의地緣政治意義及其對我國의影響研究.” 『延邊大學學報·社會科學版』 第41卷 第4期(2008).

韓銀安. “淺析地緣經濟學.” 『外交學院學報』 第75期(2004).

黃枝連, 『東亞의禮儀世界—中國封建王朝與韓半島關係形態論』. 北京: 中國人民大學出版社, 1994.

언론 매체

『光明日報』

『新華社』

『人民日報』

Korean Peninsula's Peaceful Unification Process and China

Jin, Jing-Yi (Peking University)

Abstract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the Northeast Asian region entered a period of new order which has been unfolding with the Korean Peninsula on its center.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originated from the still existing Cold War structures and the remaining Cold War structure originated from the disruption of Korean Peninsula. The 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will ultimately dismantle the Cold War structure. Thus, Korean Peninsula's "geopolitical significance" will weaken and "geoeconomic significance" will stand out, changing "passive peace" into "active peace", "uncertain factors" into "certain factors".

For China, the 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means complete resolution of the issues that have kept on influencing China since Modern age which also means that Korean Peninsula will take the crucial role in economic integration and building up new order and in Northeast Asia by becoming linkage of marine economic zone and continental economic zone. It is not the Unified Korean Peninsula but the disrupted Peninsula that threatens China's security. The rise of China and 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is the most stable relationship in Northeast Asia. The clear

establishment of the relationship will work as a positive energy in constructing the new order in Northeast Asia.

Key words: Peaceful Unification Process, Korean Peninsula Trust Process, North Korean Nuclear, Korea-China relation, geopolitical, geoeconomic

김경일(金景一, Jin, Jing-Yi) —————

중국 베이징대학에서 국제관계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일본 게이오대학(慶應義塾) 지역연구센터(地域研究センター), 한국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및 한국학중앙연구원을 거쳤으며, 현재 베이징대학 외국어단과대학(外國語學院) 조선언어문화학과(朝鮮語言文化係) 교수이다. 주요 저술로는 『中國朝鮮族文化論』, “淺論中國與朝鮮半島關係史的三個層面”,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 기원』 등이 있다.

역자: 안소현 —————

현재 연세대 강사이고, 중국고전문학을 전공하였다. 최근 논문으로 “완적 영희시 연구” 등이 있다.